

기고 ▶5면

박근혜 비밀정부 게이트와 공영방송

참관기 ▶6면

Inter BEE 2016…HDR이 대세로

오피니언 ▶7면

[칼럼]실감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성난 촛불 민심 ‘활활’



11월 12일에 이어 19일에도 전국적으로 100만 여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시간이 지나면 기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박 대통령의 태도에 집회는 지방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 나갔다. 오는 26일에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는 100만 명을 넘어 최대 3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KBS 보도 통제에 인사 개입까지” 의혹 제기 언론노조,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공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문화계와 스포츠 분야를 넘어 정·재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KBS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 등 공영방송 인사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KBS 내 언론노조 KBS본부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고인이 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에는 2014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 17번에 걸쳐 KBS 인사와 방송에 개입한 메모가 담겨 있다”며 “메모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세월호 사태로 촉발된 김환영 사장 해임 직후 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 과정에 전면적이고 깊숙이 개입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6월 12일 민정수석에 내정된 이후 정식 임명장을 받기 전부터 각종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으며 6월 16일 홍보 및

미래전략수석에게 KBS 사장 선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는 “(김 전 수석의 메모를 보면) 당시 언론노조 KBS본부가 기자회견, PD협회, 기술인협회 등 사내 16개 단체와 연대해 새로운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검토하고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한 뒤 방송통신위원장과 의논토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새 사장 선임 시 사추위와 특별다수제 도입은 KBS 이사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KBS 인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은 지난해에도 제기된 바 있다. KBS 사장 공모에 지원해 최종 5인 후보에 포함됐던 강동순 전 KBS 감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수석이 KBS 이사 2명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 씨를 후보로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소문이 파다했다”며 “1차

투표 당시에는 여당 추천 이사 7명이 1인 2표씩 14표를 가졌고, 나와 고대영 씨가 5표씩 나왔는데 2차 투표 때는 여당 추천 이사 7표(1인 1표)가 한쪽으로 쏠렸다”고 폭로했다.

당시 고대영 사장은 언론노조 KBS본부가 공영방송 사장 부적격 후보로 분류한 대표 인사로 불공정 방송의 핵심 인사로 비판받고 있었다. 지난 2009년 보도국장 재임 당시 KBS 기자회견의 신임 투표에서 93.5%의 불신임을 받았고, 2012년 보도본부장 재직 시절에는 KBS 양대 노조 신임 투표에서 84%의 불신임을 받아 해임된 바 있다. 언론노조에서는 “사실 보도조차 가로막으며 공정성을 훼손하고 KBS 구성원들로부터 불신임당한 인사가 어떻게 KBS 사장 후보자 자리에 올라 인사청문회를 앞두게 됐는지 분명해지는 순간”이라며 “누가 이인호 이사장에게 고대영 선임을 주문했는지, 이인호 이사장은 이 주문을

이사회에 여당 추천 이사들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청와대가 방송사 사장 선임에 개입하겠느냐”며 이 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의 메모가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KBS 인사 개입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된 바 있는데 김 전 수석의 메모에도 KBS 개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담겨 있다. 2014년 7월 2일 메모에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KBS 보도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 8월 27일 방심위는 KBS 보도를 전체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9월 4일 방심위는 KBS 뉴스에 대해 ‘원고’ 처분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언론노조는 “당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문제 발언이 KBS 뉴스를 통해 나간 뒤 검찰의 검사장급 고위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제보가 왔다”며 “이후 취재 TF팀은 김영한 민정수석관 연락을 해 취재진의 입장을 적극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청와대가 정치적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영방송을 상대로 부당한 인사 개입과 방송 통제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왔다”며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현 KBS 이사장과 사장에게 △특검 대상에 공영방송에 대한 인사 개입과 방송 통제 포함 △언론장악방지법(현재 발의 중인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의 개정안) 통과 △이인호 이사장의 청와대 압력 자백 등을 촉구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또다시 안갯속으로 새누리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법안심사 소위 회부 거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 등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KBS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개입 논란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60명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업자 5명과 종사자 5명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에서 편성책임자 임명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던 특별다수제는 KBS 이사회 구조처럼 여·야 추천 비율이 정해져 ‘과반수’를 정족수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치로 과반이 아닌 2/3 또는 3/4 이상 찬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치권과 학계,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이 꾸준히 주장해왔던 제도다.

관련 업계에선 지난 7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 야3당이 올해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KBS 등 공영방송으로 확대되면서 새누리당도 어쩔 수 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

선법을 비롯한 109개 법안 처리를 놓고 논의했지만 여야의 의견 차가 커 이날 회의에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민주 의원은 “3당 간사가 모여 논의한 결과 109개 법안 가운데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먼저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먼저 올리자고 말했으나 새누리당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기 어렵다”며 소위 회부를 거부했다.

안정장 더민주 수석전문위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109개 법안을 모두 법안심사 소위에 넘기자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비롯한 방송 관련 법안만 빼놓고 나머지를 법안심사 소위에 넘기자는 것

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의 입장 변경으로 당초 11월 16일과 17일로 예정됐던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는 그다음 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권 부역 방송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KBS와 MBC의 ‘박근혜 지배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 거부하는 보수 정권의 연장 시도”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새누리당은 현재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만 봐도 양상이 다르다”며 “친박과 비박 모두 보수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보수 정권과 재벌자본의 커

넥션”이라며 “친박과 한통속이 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거부하고, ‘재벌특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비박의 행보는 대한민국을 부정부과 비리, 부패와 타락의 나락으로 빠트린 보수 지배 체제를 그대로 연장하겠다는 정치적 커밍아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공영방송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란 국민의 비난 여론 속에서 새누리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반대하고 나섰다”며 “(법안의 상정을 막고 나선) 새누리당 박대철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연내 처리를 무산시킬 셈이나”고 반문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박 의원이 밝힌 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여야의 편차가 크다면, 새누리당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왜 소위를 통해 논의하려 하지 않는가”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만든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이나”고 비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격변의 유료방송 시장

지상파VS유료방송, 로컬 초이스-요금 표시제 놓고 공방 치열

“지상파와 PP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PP와 달리 지상파만 CPS 인상 요구하고 있어”



지상파 재송신료(CPS)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갈등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로컬 초이스(Local Choice), 요금 표시제’ 등의 방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상파 측은 콘텐츠 진영이 빠진 반쪽짜리 ‘유료방송발전연구반’에서 제안한 로컬 초이스·요금 표시제 등이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안들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케이블을 중심으로 한 유료방송 측은 “과도한 콘텐츠 대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11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차 유료방송 발전 방안 공개 토론회’를 열고 유료방송발전연구반이 제시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1차

공개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유료방송 권역 폐지, 동등결합상품, CPS 지불 방식 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미래부가 발표한 로컬 초이스와 요금 표시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로컬 초이스는 ‘알라카르테(A-La-Carte, 단품 메뉴)’ 방식과 비슷하다. 알라카르테는 여러 채널을 묶어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채널에 대한 시청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과금 체계다. 다만 알라카르테가 모든 채널을 상대로 진행된다면 로컬 초이스는 지상파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알라카르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옥석 가리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도입을 추진했지만 케이블 업계에선 “지상파와 경쟁력이 높은 몇몇 PP 이외에는 시청자에 대한 노출이 떨어질 게 뻔하다”며 “전반적인 PP 산업의 위축을 불러와 콘텐츠 차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처럼 몇 년 전만 해도 알라카르테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케이블 측은 최근 지상파가

CPS 인상을 요구하자 기본 채널에서 지상파를 빼고, 지상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별도의 요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케이블 위기 극복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5일 열린 기자회견회에서 ‘원케이블’ 전략을 소개하며 그 일부로 로컬 초이스 상품을 언급했다. 지상파의 요금을 고지서에 별도로 표시해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CPS 요금이 인상된다면 그 인상분 역시 고지서에 명시된다.

미래부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만 CP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사업자들의 상품 구성에서도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창훈 MBC 부장은 “로컬 초이스와 요금 표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CPS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상파와 PP를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의 지적에 대해 케이블 업계와 몇몇 학계 전문가들은 “PP와 달리 지상파가 과도하게 CPS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상파만 따로 분류하자는 것”이라며 CPS 갈등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방안이라고 반박했지만 이 부장은

“토론회 패널도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며 “형평성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면 지상파만 대상이 되는 로컬 초이스가 아닌 모든 채널에 적용되는 알라카르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별도 요금 표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협회는 “미국에서 법제화 되지도 못한 로컬 초이스를 마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소비자 단체로부터 소송까지 당한 요금 표시제를 마치 시청자를 위한 제도인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기에 유감스러운 수밖에 없다”며 “방송법상 금지 행위에 명백히 해당하는 로컬 초이스는 말할 것도 없고, 요금 표시제 역시 유료방송이 그동안 누려온 이익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변칙적인 방식으로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료방송은 흡소핑 채널 사이사이에 지상파를 배치해 막대한 송출 수수료를 얻고 있다”며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한 콘텐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사업자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콘텐츠 비용을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협회는 마지막으로 “만약 유료방송이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지상파뿐 아니라 모든 콘텐츠에 대한 공급 비용, 셋톱박스 비용, 흡소핑 수수료 수익 등 실질 원가 내역 전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유료방송 권역 폐지 약(藥)될까 독(毒)될까 미래부 “권역 규제는 이미 무의미한 실정” VS 케이블 “케이블 가치 하락”

정부가 케이블 권역 폐지, 동등 결합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발전연구반이 10월 27일 1차 공개 토론회에서 공개한 ‘유료방송 발전 방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11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차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방송·법제·경제·경영·기술·소비자 부문 등 관련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연구반은 산업적 성장 기반 조성,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 제고라는 큰 틀에서 △케이블 권역 제한 폐지 △동등 결합 제도 도입 △로컬 초이스 및 요금 표시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큰 논란은 케이블 권역 제한 폐지다. 현재 78개의 사업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해 허가 받은 구역의 범위 외에 구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역성에 바탕을 둔 케이블 산업은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각자의 권역에서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가입자들은 서비스를 해지한 뒤 지역 SO로 다시 가입해야만 한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은 “이미 유료

방송의 경쟁이 전국 단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케이블과 인터넷TV(IPTV) 등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적용하는 합산규제를 도입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권역 규제가 무의미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미래부는 “권역 폐지로 지역 사업자로서의 케이블의 정체성이 상실될 수도 있고 IPTV의 SO 인수합병 확대, 오버 빌딩(Over-Building)으로 인한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실제 경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기대 효과가 있다”며 권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일준 티브로드 상무는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경쟁을 유도한다는 건 신규 가입자 창출이 아닌 기존 가입자를 뺏아오는 형태가 된다는 것인데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사업 권역이 폐지된다는 건 케이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역이 폐지되면 결국 (케이블은) 할당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SK브로드밴드에서는 권역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은 “이미 권역별로 케이블, IPTV 3개 사업자, 위성방송 등 5개 사업자가 경쟁 중”이라면서 권역 폐지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등 결합 제도를 놓고서도 사업자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이날 미래부는 동등 결합과 관련해 이달 안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동등 결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건이나 대가 등 준거 틀이 되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을 만들고 있다”며 “의무 제공 사업자 이외 사업자의 참여 부분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은 이동통신사와의 결합상품으로 가입자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동등 결합 제도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입장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동등 결합 의무 제공 사업자로, 최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 HCN, 울산중앙방송 등이 요청한 동등 결합 상품 판매 출시를 받아들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케이블 업계는 SK텔레콤 온가족플랜 결합상품과 동일한 할인율로 가닥을 잡고 내년 1월경 상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 의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케이블과 협상을 할 필요는 없지만

SK텔레콤과 케이블 간 결합상품이 나올 경우 SK텔레콤의 영향력 확대 우려와 가입자 추가 확보 때문에 동등 결합 제도 자체를 반대하거나 케이블과의 결합상품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날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 결합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도입 이전에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IPTV 결합상품 재판매, 위탁판매 등이 먼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훈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SK텔레콤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SK브로드밴드의 IPTV 순증 성과가 1위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사실상 재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고,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도 “유료방송 사업자도 아닌 방송 무면허 사업자가 이 자리에 왜 나온 건지 모르겠다”며 SK텔레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창훈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KT와 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진실을 호도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며 “KT는 유료방송과 초고속에서 1위 사업자이고,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로 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사건건 충돌의 목소리만 나왔다. 미래부는 당초 오는 12월 초까지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해당사자 모두 각각의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견 조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통위, UHD 방송국 허가 KBS1·KBS2·MBC·SBS 4개 방송국에 대해 3년 신규 허가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1일 제63차 전체회의에서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신청한 수도권 지역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국 신규 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허가는 지상파 UHD 도입 1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를 위한 것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3개 사업자(KBS, MBC, SBS), 4개 방송국(KBS 제1UHD·DTV방송국, KBS 제2UHD·DTV방송국, MBC UHD·DTV방송국, SBS UHD·DTV방송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5월 26일 의결한 ‘지상파 UHD 신규 허가 기본 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가 콘텐츠 제작 및 투자 계획, 경영기술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방송 사업자의 기술·재정적 능력 및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이 심사 기준에 부합해 허가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기존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KBS 등 3개 사업자 4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를 결정하고, 본 허가가 신규 허가라는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는 방송사의 허가 신청서상 콘텐츠 투자 계획이 지난해 12월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마련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허가에 앞서 지상파 방송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방송사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허가 조건으로 △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콘텐츠 투자 금액 이상 집행 △UHD 투자 및 편성 실적·계획 등 UHD 추진 상황이 포함된 ‘지상파 UHD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서’ 매년 제출 △2017년 UHD 프로그램 5% 이상 편성, 매년 5%씩 확대(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이상) 등을 내걸었다.

이밖에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운용 개시 일정 준수, 수신 환경 실태 조사 및 조치 계획 제출, 콘텐츠 보호 기능 탑재 시 시청자 보호 조치, 신규 부가 서비스 제공 시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등의 내용이 허

가 조건에 담겼다. 또한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UHD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일각에서는 내년 2월 UHD 본방송 개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나, 내년 2월 본방송 개시에 대한 방송사의 의지가 확고하고, 가전사도 UHD TV의 적기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다가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UHD 중계를 위해서는, 계획대로 UHD 본방송을 시작해 올림픽 중계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에 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사에게 평창올림픽의 UHD 중계에 차질이 없도록 본방송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제고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방송기술용어

데이드림

데이드림은 11월 10일 그 모습을 드러낸 구글의 가상현실(VR) 플랫폼이다. 앞서 지난 10월 4일 구글은 새로운 VR 헤드셋 ‘데이드림 뷰’를 공개한 바 있다. 이전의 구글 카드보드가 종이로 만들어진 일종의 필드 테스트였다면 후속작인 데이드림 뷰는 패브릭 재질로 만들어진 완성도 높은 진정한 모바일 VR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한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컨트롤러를 탑재해 이용 가능성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했다. 또한 구글은 기술 표준을 공개해 다양한 제조사

가 주변 기기 제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데이드림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드림 레디’라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하도록 했다. 추후에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업그레이드할 때 강제적으로 데이드림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드림은 단순한 헤드셋이라기보다 VR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한 클레이 베이버(Clay Bavor) 구글 VR팀 리더의 말처럼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전숙희 sh45@kobeta.com

수출이나 안전이나…스마트폰 라디오 직접 수신 ‘의무화’ 두고 공방전 토론회에서 각 분야 관련자들 간에 치열한 설전



지난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고 지진의 규모보다 더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은 휴대전화의 불통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대비책으로 스마트폰의 라디오 직접 수신이 다시 한 번 제의된 가운데 ‘의무화’가 필요한지를 두고 격렬한 설전이 오갔다.

배덕광 국회의원은 지난 9월 스마트폰의 라디오 수신 칩 활성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에 관한 토론

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부, 학계,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방송사, 시민단체 등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은 남서울대 교수는 2015년 코바코의 조사에 따르면 라디오가 사양 산업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라디오 접촉률이 상승했다며 재난 경보 매체로서 라디오 직접 수신的重要性和 해의 현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은 만큼 스마트폰을 이용했을 때 재난 정보가 효율적인 도달률을 보이며, 직접 수신할 경우 스트리밍 라디오보다 배터리 소모량이 3~6배 정도 적어지는 등 스마트폰의 라디오 직접 수신이 훌륭한 재난 경보 매체라는 점에는 토론자들 모두 동의했다. 다만 문제는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지였다.

이 교수는 “실시간 교통 정보, 뉴스, 기상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 수신이 가능해 제일 중요한 데이터 수신 서비스가 이미 2005년 개발이 완료됐음에도 이동사의 반대로 탑재되지 못했다”며 라디오 직접 수신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스트리밍 라디오를 통해 데이터 이용료를 벌려는 이동사의 속셈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스트리밍 수신 시 사용되는 데이터는 얼마 되지 않으며 자체 조사에서 마케팅이나 영업 이익을 위해 라디오 수신 칩을 비활성화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 교수의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동사는 수신 칩 비활성화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책임을 단말기 제조사에 넘겼다.

바통을 이어받은 단말기 제조사에서는 의무화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몇 가지 조건을 붙였다. 배문수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은 “진행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긍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 제조사만이 아니라 국외 제조사에도 같은 의무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서는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의무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권병욱 미래부 전 과방송관리과장은 “국제 표준화, 해외 동향 등도 중요한데 의무화를 한 국가는 없다”며 사실상 시장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무역장벽, 디자인 변경 등 제조사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진봉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무역장벽이 문제라면 애플도 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는 왜 수신 칩 활성화를 하고 있느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 국민의 입장에서 제조사의 이익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강경하게 발언했다. 또한 “자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화·법제화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진짜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했다면 진입장벽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보다 제조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언론이 바로 설 기회

MBC 노조 “다시 모였다. 한 번만 더 믿어 달라”

‘MBC 방송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결의 대회’ 개최…“MBC 살리기 위해 다시 싸우겠다”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MBC 기자들이 쫓겨났다. 촛불집회 상황을 보도하려 했던 MBC 기자들을 향해 시민들은 야유를 보냈다. 시민들은 MBC 기자들을 향해 “여기에 왜 왔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하는가 하면 욕설까지 내뿜었다. 결국 MBC 기자들은 현장을 떠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시민은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시민들이 ‘비정상적인’ MBC에 등을 돌리자 MBC 내부 구성원들이 다시 일어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1월 10일 저녁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MBC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공영방송 MBC를 다시 살리기 위해 싸우겠다”며 “염치없지만 마지막으론 한 번만 더 믿고 성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MBC 노조는 “지난 10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최순실이란 이름을 언급할 때까지 한 달간, (이미 종합편성채널에서는 최순실에 대해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었는데) MBC 뉴스데스크에서 최순실은 언급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그 어떤 것이었다”며 ““황우석 논문 조작”을 폭로하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성’을 공박했던 MBC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MBC 기자들, 카메라 기자들, 중계차 요원들은 시민들이 운집한 현장에서 욕설을 듣고 내쫓김을 당했다”며 “5년 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 제작 거부와 파업에 들어가 170일간 싸웠지만 이기지 못해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200명에 달하는 MBC 구성원들이 해고되고, 정직되고, 부당 전보돼 자기 자리에서 모두 쫓겨났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MBC 뉴스데스크가 살아 있었더라면, PD수첩이 살아 있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국정농단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며 “저희 탓이고,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이었다.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MBC가 촛불 현장에서 배척을 받은 것이 처음”이라며 “MBC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바르탈 하고 쫓겨난 조합원, 취재 잘하고 국민과 시청자를 위한 방송을 하던 기자·PD·아나운서·엔지니어·전문 경영인

들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창호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본부장은 “시정자들이 없으면 방송사도 없다”며 “MBC 현 경영진들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MBC 노조는 “MBC 보도를 이렇게 만드는 데 앞장선 안광환 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 최기화 보도국장, PD수첩을 말살한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김현중 편성제작본부장, 지역사를 망가뜨리는 안광환 경영진의 꼭두각시 사장들이 하는 짓을 두고 보지 않겠다”며 “MBC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 쫓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는 18개 지역 MBC에서 올라온 조합원들과 언론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개탄의 발언도 이어졌다.

도건철 대구MBC 지부장은 “쫓팔린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가다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MBC에 필요한 건 영양제가 아니라 제초제”라며 “정권의 부역자들을 심판해야만 MBC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찬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는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폭압적인 상황에 얼굴을 내밀고 저항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다”며 “하지만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목소리

를 죽이고 있기에 너무나 큰일이기 때문에 다시 모였다”고 발언을 열었다. 이 간사는 “국정원 해킹부터 세월호 논란, 총선, 국정 교과서 문제, 백남기 농민 문제 그리고 최순실까지 MBC는 그 모든 사안을 청와대 시각에서 뉴스화했다”며 “안광환 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 최기화 보도국장은 MBC가 아닌 청와대로 가서 청와대 방송을 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결의 대회는 당초 MBC 경영센터 1층 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사측이 불허하면서 건물 출입구를 모두 봉쇄해 결국 18개 MBC 지역에서 올라온 조합원들은 MBC 밖 길바닥에 자리를 폈다.

MBC 사측은 “회사의 정상적이고 정당한 각종 정책과 경영 행위에 대해서 왜곡과 음해를 가하고,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편향된 관점으로 자학성 비난을 일삼다가 이제 다시 회사를 정치 투쟁의 장,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1노조는 MBC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1노조가 외부 정치 세력과 연대해 자신들의 정치 활동을 선전, 선동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규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느 누가 되더라도 사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방송사로서 이와 같은 보편적인 원칙을 어기고 회사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고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선하 baek@kobeta.com

언론·방송학자 484명 “언론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산다”

언론·방송·언론정보학회 공동 시국선언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소속 언론·방송학자 484명은 11월 17일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언론 관련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국내 3대 언론학회 소속 언론·방송학자들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한 뿌리처럼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없는 사과와 꼬리자르기식 담화로 책임을 회피하며 국면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 언론·방송학자들은 한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하는 한편 무

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감시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 언론이 권력 집단의 일원으로서 혹은 권력 집단에 의해 조종되면서 권력에 대한 감시자이기보다는 권력의 공모자, 호위자로서 기능해 왔기에 이번 사태에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국 언론이 본분에 소홀했던 주요 원인으로 방송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꼽을 수 있다”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언론을 정립하고, 권력의 코드 맞추기로 작동되는 방송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언론·방송학자들의 바람과 달리 현재 국회에서는 방송 관련법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언론·방송학자들의 이번 시국선언이 정치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언론 태도 변해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긴급 토론회 통해 대기업과 언론에 쓴소리

미르재단·K스프츠재단에 다수의 대기업이 거금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들이 ‘피해자’로만 그려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일조하고 있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은 11월 11일 긴급 토론회

를 마련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은 상태에서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승마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삼성, 한화 등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자본 세력과 비선실세인 최순실, 국가 정권을 쥔 박근혜 대통령의 밀착 관계를 설명

하며 이들의 관계는 공모자·상보적 협력 관계 모형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이들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체계로 보는 것이 상식적 해석일 것”이라며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고 강탈과 갈취가 이뤄지는 수직적 형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아마추어 저널리스트가 겨우 이틀간 조

사한 것으로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진짜 기자들이 달려들었다면 수백 건의 기사가 나왔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불거져 나온 정경유착의 실마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 언론을 꼬집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최순실만이 비선실세인가?”라는 물음으로 입을 열며 현재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비정상적 몇몇 개인의 일탈로 그려질까 우려스럽다”며 언론 보도 태도의 변화와 지속적인 탐사를 강조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주
성균관대 사회과학대 연구교수
제3언론연구소장

대부분의 사람들과 언론은 모든 권력자의 뒤에 비선실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권력자의 뒤에만 비선실세들이 있겠는가. 모든 조직의 수장 뒤에는 선출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직을 좌우하는 비선실세들이 있다. 크고 작은 거의 모든 조직들은 공선(公線)이 모르는 수장(두목)의 비선들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선은 항상 누군가에 의해 폭로되거나 적발된다.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다른 집단에 의해서든, 비선의 위험성을 감지하는 공선에 의해서든 비선실세들은 결국 드러나고 그들이 행한 온갖 비리와 패악들이 고발당한다.

영애의 시절부터 의심받던 박근혜를 움직이는 혹은 박근혜가 움직이는 숨은 세력들의 정체가 최순실로부터 시작된 박근혜 비밀정부 게이트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세월호 침몰 사태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심상시,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거대한 비밀조직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안과 밖을 비밀스럽게 연결하며 공식 정부마저 무력화시키며 전방위적인 비리와 권력 남용, 갑취와 인사권을 휘둘렀던 비밀정부 요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일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박근혜 비밀정부 게이트 관련 소식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쫓아가기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하지만 박근혜 비밀정부 게이트는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부와 권력 뒤에는 부여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인 권력의 주인 노릇을 했던 비선들이 있었다. 어찌 보면 박근혜 비밀정부 게이트는 우리 사회 자체가 비선출, 비공식, 비밀 실세들의 거래와 나눠 먹기라는 비정상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종합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준 것과 동시에 1%의 초거대 계급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구조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박근혜 이전의 이명박, 이명박 이후의 박근혜 - 그들의 공작 정치와 쇼 비즈니스

2008년 광우병 유행 가능성이 있는 미국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거나 수입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당시 정부는 정치적 무지나 반미 불순분자들의 선전선동으로 내몰면서 언론을 포함한 여론 공간들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공론장을 위협했다. 2010년 3월,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함이 침몰했다. 이로 인해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되었다. 해군과 정부의 발표와 달리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분출되었다. 정부는 북한 어뢰에 의해 폭침당했다고 발표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명확하지 않은 증거들, 해명되지 않는 사실들, 엇갈리는 진술 등이 이러한 의혹들을 확산시켰지만 정부는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며 ‘문지 마’ 애국심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4대강 프로젝트에 공식 투입된 예산은 22조 2000억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액수가 밝혀지지 않은 채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토 개조 사업을 둘러싼 수많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반론이 되풀이되었다. 하지만 문제의 제기 집단과 정부 간에 상호 인정할 수 있는 합의점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국내외의 다양한 비판적 여론과 그런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 사업 진행이 충돌한 채 현재 개조된 4대강은 가뭄이나 홍수, 물류 운송이나 선박 운항, 관광 산업 활성화나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강의 생태 환경의 악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또다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석유, 광물, 가스공사 등 자원외교 3대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6조 원이나 투자했지만, 안정적 자원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정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나 공무원들이 침묵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간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한 유례없는 대형 참사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10명의 실종자를 바닷 속에 남겨둔 채,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분노와 불안, 좌절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침몰하는 배에서 인명을 구조해야 할 국가 장치들의 부재, 열악하다는 말조차 완곡어법일 정도로 불비하고 체계없는 재난구조 시스템, 변명하는 정부, 제기되는 의혹들, 언론 통제와 압박을, 유언비어 유포자 처벌이라는 명분으로 차단되는 정보들은 단순히 컨트롤타워나 리더십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부재가 야기하는 위험사회, 또는 재난 자본주의의 전모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한 물대포 세례, 유가족을 비하하는 일부 언론과 일베 등 극우 보수적 문화 정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방해와 강제적 해체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정부와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영역의 무책임과 무능력은 한국 사회의 위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것 뿐인가. 2015년 5월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전쟁용 살상 무기인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었다. 쌀 한가니 분량에 100만 명 이상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사율 95%의 살상 무기가 택배로 배달된 것이다. 정부는 특별한 진상 규명 조치가 없었고, 대부분의 언론은 이에 대해 침묵했다. 고리 원전 1호기의 정전 사건의 발생과 그 후에도 계속되는 원전 사고와 방사능 물질의 누출에 대한 의심이 커지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전 수출이라는 정부와 에너지 부족을 내세운 원전 건설 자본의 견고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대한민국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한시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했다. 급격히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하는 치사율, 응급실 폐쇄와 문을 닫는 병원들, 초기 방역 실패와 은폐, 뒤늦은 정보 공개,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에 쏟아지는 비판들이 이어졌다. 정부는 또다시 유언비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와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뒤늦게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 출현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현장 연출과 설정 논란이 뒤를 이었고, 대통령은 뜬금없이 손 씻기 교육에 나섰다. 여당 대표는 메르스 경로 음식점에 등장해 식사하며 그저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는 오래 묵은 의지론을 설교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강행과 비밀스러운 집필 작업,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망한 백남기 농민,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과 중단된 개성공단 문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과 사드 배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근혜 이전의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이후의 박근혜 정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거짓과 여론 조작, 언론 회유와 통제를 포함한 공작 정치와 쇼 비즈니스로 연명했다.

그런데 공영방송은?

끊임없이 터지는 재난과 사건사고, 정부의 실정과 거짓말하기, 사건 은폐와 비밀스러운 거래의 흔적들이 드러나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진실을 추구해야 할 공영방송은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정보 공작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제왕적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방송사 조직 내 두목에게 충성을 바치고 부귀영화와 작은 권력이라도 가져보고자 탐하는 핵심 부하들이 공영방송의 주요 요직들을 차지했다. 이들은 비판적인 저널리스트들을 내쫓거나 무력화시키는데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권력을 휘둘렀다. 심층취재 시사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뉴스 보도는 대통령과 정권 보호를 위한 홍보물로 넘쳐났다. 예능화된 보수 저널리즘의 무대인 종편 채널에 눈을 돌리는 사

람들이 늘어나고 진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온라인 공간과 SNS에 모여들었다. 공영방송 내부에서 심화되는 대통령과 권력에 대한 충성 경쟁은 방송사 내부의 능력 있고 신뢰받는 기자와 PD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시민들의 작별 인사를 재촉했다. KBS와 MBC, YTN은 지금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송사로 전락했다. 어디 저널리즘의 문제로만 끝났겠는가? 신선하고 실험적인 아이디어와 포맷으로 무장한 유료방송 채널과 PP들에게 드라마와 예능에서도 한참 뒤쳐지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더니 이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광고 좀 더 늘려주세요!”(중간광고 허용, 광고 총량제, 광고 품목 규제 완화 등)라고 애걸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창의적인 노동자들을 온갖 협찬과 PPL 영업 인력으로 만들고 “줄만 잘 서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우주적 기운’처럼 공영방송사를 배회하고 있다.

박근혜 비밀정부 게이트는 공식적인 정부 기관들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통해, 조정, 무력화, 조작하는 비밀스럽고 사적인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온갖 언론 통제와 포섭, 여론 조작이 치밀하게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다. 그래서 계속 의심스러운 질문이 이어진다. 공영방송을 장악한 충성스러운 그 부하들도 혹시 최순실 라인인가?

공영방송의 집단적 저항력을 만들어내자

변명하지 말자. 공영방송의 수뇌부와 핵심 부하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리고 한국 사회의 1% 초거대 계급을 위해 복무하며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제도 자체를 파괴시키고 내부 종사자들의 위상과 자부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이 결과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은 권력으로부터 ‘특별한’ 혜택과 지원을 등에 업고 정부의 실질적인 하부 체계로 기능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공영방송은 정부와 권력, 자본과 기득권 집단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상실한 채 오히려 이들을 위한 연출된 전시 무대를 제공해 왔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담론과 논쟁을 촉진시키고 비판적인 공중을 형성하고 상호 매개하는 공영방송의 기능은 권력과 충성스러운 방송계 신하들에 의해 승인받은 내용, 꾸며진 내용, 선전선동 기능으로 전락되었다. 시민들은 권력과 기득권 집단, 그리고 정치적 언론 권력자들의 전략적인 결합과 협력이 만들어내는 조정, 나아가 조작된 정보와 연출된 스펙터클의 공세에 놓이게 된다. 엄청난 물량의 정부 광고와 캠페인이 공영방송의 큰 손이 되고, 대통령이나 관료들은 공영방송을 통해 제조회 스펙터클에 자신의 정치를 의존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불이 아니다. 시민들은 공영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정부의 발표나 제안들을 믿지 않으며, 연출된 스펙터클을 조롱한다. 시민들은 정부와 권력 엘리트들을 보호하려는 미디어 엘리트들에 대해 비판의 관점과 무기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의 미디어 환경에서 언제든 지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수많은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민들은 권력과 기득권 집단 그리고 미디어 권력자들이 원하는 그런 유순하고 수동적인 존재들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가장 심각하고 위협적인 문제 중 하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비밀스럽고 폭

력적으로 작동하는 정부와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체계적 비정상성, 그리고 이와 협력하고 있는 주류 언론의 타락이다. 무능력하고 허술하며 온갖 비리에 물들어 있고, 자본 권력과 끈끈하게 한 몸이 되어 있으며, 자신의 밥그릇을 공고하게 하거나 더 키우기 위해 최첨단의 통치 테크닉, 혹은 꼼수를 만들어내며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정부-언론-시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극히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대부분의 미디어, 특히 공영방송은 참담할 정도로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은 공식적, 비공식적 정부(비밀정부)와 거대기업 및 1%의 기득권 지배집단에 종속되어 있다. 공영방송은 자신이 대의 해야 할 ‘public’을 망각한 지 오래다. 더 나아가 공영 방송의 수뇌부와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스스로가 국가-자본-1% 기득권 정치 체계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이들과 거래한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TV조선, 한겨레신문과 JTBC로 이어지며 박근혜 비밀정부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KBS나 MBC, YTN의 뒷북치고 따라가기식 보도가 그리 믿음직스럽지 않다. 지금도 공영방송의 수뇌부와 이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목을 죄어오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데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불확실한 국제 정세의 전개 속에서 이들은 박근혜 비밀정부 게이트를 빠져나올 수 있는 의제의 설정과 이슈 전환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KBS나 MBC에 대한 정치적 장악, 종편 허가 및 계속되는 특혜, 극도로 정부 편향적인 종편 저널리즘의 방치, 지역방송 및 소규모 방송 조직에 대한 외면이나 무대책, 광고 시장의 전면 자유화와 양극화, 비판 언론(인)과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규제와 탄압, 표현과 창작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와 과잉 저지, 인터넷이나 SNS에 대한 감시와 규제, 전반적인 저널리즘의 질 하락 등 부정적 양상들의 중첩 속에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집단적 저항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의 개혁(사장 선임 방식, 이사회 구성 방식, 의사결정 구조 등)이든, 방송통신위원회의 개혁이든, 미디어법을 다시 개정하거나 국민들의 동의와 공영방송의 개혁 비전들과 함께 진행되는 수신료의 인상을 통한 ‘공영성’의 강화든, 인사권을 쥐고 남용되는 사장 권력의 제한과 공영방송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는 등의 수많은 토론과 실질적인 실천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 박근혜 비밀정부 게이트 국면에서 KBS와 MBC, YTN을 중심으로 그동안 보도를 통제하고 압력을 행사하던 사장이나 보도본부장과 국장 등 주요 간부들의 퇴진을 요구하거나 게이트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비밀정부의 언론계 ‘부역자’들에 대한 폭로와 퇴진 요구, 기자들의 파업, 독립적이고 공정한 저널리즘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들이 시민들의 손을 잡고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비밀정부 게이트는 공영방송에게 다시 부활의 기회와 ‘PUBLIC’과 함께 하는 공영방송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전환기적 에너지를 모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전환은 공영방송의 종사자와 시민, 그리고 언론학과 국회의 개혁 연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ter BEE 2016 개최... HDR이 대세로 떠올라, 8K 시연도 곳곳에서

김봉기 SBS 편집기술팀 매니저



국제 방송장비 전시회 Inter BEE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총 7개의 홀(Hall2~Hall8)에서 Video Production, Audio, Lighting 등 장비가 전시됐고, 각종 콘퍼런스(Inter BEE FORUM, Inter BEE CONNECTED, Inter BEE IGNITION, Inter BEE CREATIVE)도 진행됐다. 또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공간도 마련해 참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HDR,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시청자의 입장에서 비디오 영상에 보다 몰입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4K라는 고해상도와 더불어 다이내믹 레인지를 넓게 하는 HDR이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의 디스플레이에서는 구현하지 못하던 한계를 넘어, 현실에 보다 가까워진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디테일한 표현으로 사실감을 강조한 영상미를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7월 ITU-R은 HDR TV에서 사용될 국제 표준을 제정했는데 기존에 상용화된 HDR TV에 많이 채택되었던 PQ(Perceptual Quantization) 기반은 물론 하위 호환성으로 방송계에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HLG(Hybrid Log-Gamma)도 포함되었다. ITU-R BT.2100-0 표준이 확정되었고 이제는 보다 구체화된 기술의 표준 제정과 그에 따른 HDR 방송 장비의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Inter BEE 2016에서 가장 시선을 사로잡은 기술은 HDR이었고, 많은 제조사에서 관련 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시연하였다.

SONY는 'Beyond Definition'을 테마로 제작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였다. 초고화질(UHD) 방송을 송출하더라도 HDTV로 수신하는 시청자를 위한 하위 호환성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HDR 방송 제작/송출 시에도 SDR 시청자를 위한 시스템은 고려돼야 한다. 소니는 'HDRC-4000' 유닛을 통해 자사 S-Log3로 촬영한 영상을 HLG 기반 HDR(4K/Rec.2020) 및 SDR(HD/Rec.709)로 Converting 시연을 보여줬다. 또한 이는 Sky JSAT와 협업으로 Live 전송을 부스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LED 소자를 광원으로 하는 독자 개발한 고화질 CLEDIS(Crystal LED Display) 대형 220인치 디스플레이로 4K 영상을 구현해 많은 관람객들이 소니 부스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Canon은 '4K HDR BY CANON'을 테마로 HDR을 전면에 내세웠다. 'DP-V2420' 모니터는 캐논이 영상 엔진과 RGB 백라이트 시스템, IPS 액정을 적용했으며 HDR 규격인 SMPTE ST2084, HLG 등에 대응하고 고화도 HDR 영상 제작을 지원하여 레퍼런스 모니터로 활용도가 높다고 담당자는 강조했다.

4K 카메라 지속 출시

4K 카메라는 이미 드라마 현장에선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다 고품질의 영상미를 추구하고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4K 카메라들이 전시됐다.

Canon은 'EOS C700' 모델을 선보였는데 이는 시네마 EOS 시스템의 최상위 기종으로 기존 C시리즈 제품과 달리 사용자가 촬영 현장에서 Customize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4K/60P의 영상을 본체에 녹화할 수 있다. 또한 Codex의 Recorder CDX-36150을 장착하여 최대 4K/120fps를 RAW로 저장 가능하다. 최대 15스톱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지며 캐논의 Log 감마도 기존 제품 라인업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전문가용뿐만 아니라 DSLR 유저를 위한 EOS-1D X Mark II, EOS 5D Mark IV 등의 라인업 제품도 출전하여 호응을 끌었다.

SONY는 렌즈 교환 XDCAM PXW-FS7의 상위 기종으로 4K Super 35mm CMOS 센서를 탑재한 'XDCAM PXW-FS7 II'를 선보였다. 내년 초에 정식 발매 예정 제품으로 전자 제어에 의한 1/4~1/128까지 연속적인 ND필터의 농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리개를 고정된 상태에서 ND필터를 조절하여 과사체의 심도 변화 없이 최적의 노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Auto ND 기능으로 실내/실외 등 촬영지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조도에 적합한 노출 값을 자동으로 세팅할 수 있다.

Panasonic은 4K와 광 전송을 지원하며 UHD/HD 출력을 지원하는 방송용 4K 스튜디오 카메라 시스템 'AK-UC300'을 선보였다. 지난 NAB 2016,

KOBA 2016에도 출품된 제품으로 파나소닉이 새로 개발한 4K 센서를 탑재했고 두 개의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있다. 하이 센스 모드는 F10, S/N 60dB를 구현 가능하며 4K 대형 센서는 별도 외부 어댑터 없이 2/3인치 렌즈 사용이 가능하다.

Video over IP의 생태계 준비

4K 전송 인터페이스를 위한 규격은 기존의 SDI에 기반한 3Gbps x 4와 12Gbps 그리고 IP 기반의 방송 입장에서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혼재해 있다. IP도 각 제조사 혹은 Alliance 별로 다른 규격의 제품군을 출시해 마치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형상을 띄고 있다. SDI 특성상 4K를 넘어서는 8K 등의 지원은 쉽지 않아 보이고 거리상 제약 등의 단점이 있다. 반면, IP 인터페이스는 보안 등의 안정성 및 무엇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진 시기 상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확장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빠르게 진일보하는 SMPTE 2022-N 기반의 제품군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계측 장비 업체 Tektronix는 IP화된 방송 시스템과 SDI와 IP가 혼재하는 방송 시스템에서 비디오/오디오/동기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미디어 분석 솔루션 'Prism'을 선보였다. 담당 매니저는 이 제품은 SMPTE2022-6 및 PTP(Precision Time Protocol)을 지원하는 Hybrid SDI-IP 프로덕션 환경에서 신호의 문제를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SONY는 'IP Live Production system'을 제안하여 IP 기반의 제작 시스템 워크플로우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사뿐만 아니라 NEC, TOSHIBA, FOR.A 등의 제품군과 IP Base로 연계하여 제작하는 시연을 볼 수 있었다. 이를 위해 SDI 인프라를 IP로 적용하기 위한 SDI-IP 컨버터, IP 오디오 믹서 등의 장비가 활용되었으며 IP 지원 스위처인 XVS 시리즈도 선보였다.

Forum으로 진행된 'Method of IP live transmission proposals'에는 AIMS(Alliance for IP Media Solution), ASPEN(Adaptive Sample Picture Encapsulation), NMI(Network Media Interface), NDI(Network Device Interface) 등 각

진영을 대표하는 강사들을 초빙하여 열린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대다수의 강연자들은 과거에 불가능했던 기술이 빠르게 채택되고 있으며 IP Base로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Long term으로 보면 유익한 제작 환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PEN의 Mr. Mo Goyal은 현재의 고비용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방송이 과거 Tape에서 Tapeless로 진보했듯이 IP도 같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진보하길 기대하고 이것은 새로운 변화와 기회임을 언급하였다.

8K, 2020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도약

8K를 탄생시킨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기에 8K 시연 영상 및 기반 기술 장비를 관람할 수 있었다. NHK 방송기술 연구소는 8K Super Hi-Vision 데모 영상을 선보였다. 미디어 전송 기술인 MMT(MPEG Media Transport)의 데모를 실시한 것인데 MMT는 영상, 오디오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방송과 통신 회선에 동일하게 전송이 가능하다.

Panasonic은 8K Recorder 'AJ-ZS0580' 시제품을 선보였다. 방송용 반도체 기록 매체인 expressP2와 microP2 카드를 사용하여 8K 영상을 기록한다. VCR Deck과 유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었으며 관람객들은 Play, Jog 등으로 영상을 컨트롤 하며 관람할 수 있었다.

NAB, IBC와 더불어 국제적인 세계 방송장비 전시회라는 타이틀을 가진 Inter BEE였기에 기대도 컸고 그만큼 실감감도 있었다. 규모와 관람객 수를 비교해 보면 KOBA와 동일 수준 혹은 그 이하라고 판단되며 국제 전시회라고 하지만 영어로 번역된 자료조차 찾기 힘들었다. 또 관람객들도 대부분 일본 내국인이었다.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도 SONY, IKEGAMI 등 일본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북미, 유럽의 장비 업체들은 최소한의 부스로만 구성해 출품한 점도 아쉬웠다. 하지만 Inter BEE 전시회장뿐만 아니라 도쿄 시내 곳곳에서 2020 도쿄 올림픽에 대한 플래카드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전시회를 통해 4K/8K 방송에 대한 일본의 준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실감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며

칼럼



호요성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장

사실감이나 현실감, 몰입감 등이 기존보다 월등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기가 인터넷, UHD 방송, 5G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다. 조만간 3차원 UHD 영상 장비와 VR과 AR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보고 듣는 즐거움을 한 차원 높은 오감으로 실감 나게 즐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촬영 영상을 하나의 파노라마 영상으로 변환하는 스티치 프로세서도 구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키점프처럼 일반인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해 실감 미디어 기술이 현실화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 센터에 구비된 시험 환경과 품질 평가에 관련된 고가 장비의 임대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지원 센터에서는 실감 미디어에 관련된 최신 기술을 교육하는 전문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력 양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2000년대 초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2차원 영상과 음향을 위주로 한 시청각 중심의 디지털 TV 연장선상에서 3차원 영상과 인간의 오감을 이용한 실감 나는 체계형 미디어 서비스의 개념을 잡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실감미디어연구센터를 설립했다. 그 후 수년간의 열띤 논의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기관을 설득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규합하여 2003년 8월에 광주과학기술원 실감방송연구센터를 발족시켰다. 실감방송 ITRC에서는 실감형 방송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3차원 영상과 음향뿐만 아니라 촉각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관련 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미디어 산업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우리는 바야흐로 실감 미디어 시대를 실감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오감 만족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실감 미디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된 분야의 기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실감 미디어 산업의 발전 없는 기가인터넷이나 UHD 방송, 5G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실감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겸비한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의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전남실감미디어 산업지원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실감 미디어 산업체를 위한 시장 환경 조성과 기술력 강화, 기술 고도화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의 창출에 기여하길 바라며, 우리나라 실감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실감미디어
산업지원센터는
실감 미디어의 제작
및 재현, 그리고
품질 평가에 필요한
연구 장비와 인프라
를 구축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관의
기술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실감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 실감미디어지원센터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실감 미디어 서비스를 언제든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360도 홀로그램 전시 시스템, VR 사격 훈련 시스템 및 교육용 실감 콘텐츠 재현 시스템 등 다양한 유형의 실감 미디어 제품들이 구축돼 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실감 미디어 기술 및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4K UHD 카메라를 포함한 특수 촬영 장비와 복수의 카메라

지난 10월 중순에 나주 빗가람 혁신도시에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전라남도는 실감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9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실감 미디어 산업 기반 구축 및 성과 확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문을 연 실감 미디어산업지원센터는 5G 시대를 이끌 실감 미디어의 대중화와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실감 미디어 체험 서비스와 중소·벤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작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며, 내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나주로 이전할 예정이라서 이런 기관들과 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는 실감 미디어의 제작 및 재현, 그리고 품질 평가에 필요한 연구 장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관의 기술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실감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서 실감 미디어 산업이란 현실 세계를 근접하게 재현하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및 오감 기술을 아우르는 실감형 차세대 미디어 산업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실감 미디어는 초고화질(UHD) 영상, VR, AR 등과 같이

사설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문제없나

우리나라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일정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초고화질은 물론이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가능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다. 본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시한다면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 방송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청자들은 직접 수신만으로도 유료방송에서 누리던 다양한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지상파 UHD 본방송은 시청자 복지 측면에서도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상파에서는 전송 방식이 확정되기 몇 년 전부터 잠정 표준 방식으로 UHD 방송을 준비해 왔다. 몇 년 동안 잠정 표준으로만 준비해오다가 지난 7월에야 이르러 지상파 UHD 전송 방식이 미국식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잠정 표준으로 준비해왔다고는 하나 표준 방식이 다르기에 방송사 내부에서는 내년 2월 본방송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본방송 일정을 맞추기가 쉬워 보이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장비 수급이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전송 방식으로 방송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장비 업체에서는 방송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누구도 해보지 않은 방식의 장비를 당장 똑딱 만들어 낼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온전한 테스트도 거치지 않은 장비로 본방송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방송에서 장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성급에 급급해서 무리하게 광파르를 터뜨렸다가는 자칫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는 TV 수신기 보급 문제가 있다. UHD 본방송은 시청자를 위한 무료 보편 서비스라는 데 의미가 크다. 하

지만 아무리 좋은 콘텐츠와 서비스로 전파를 쏘아도 시청 가능한 수상기가 없다면 공허한 전파 낭비일 따름이다. 가전사에서는 수신 환경 개선에 절대적인 안테나 내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미국 방식의 수상기 판매는 빨라야 내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내년 2월에 본방송을 시작해도 당장 수신 가능한 가구 수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럽 방식의 수상기를 이미 구매하여 사용 중인 시청자에게 미국 방식의 수신이 가능한 셋톱박스를 공급하는 문제도 추후가 불분명한 채의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는 콘텐츠 수급의 문제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4K 중계차를 구매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방송 광고 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UHD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 투자비가 소요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상황 및 경제 전망을 보면 최소한의 투자마저도 가능할지 미지수이다. 정부에서 정한 UHD 최소 편성 비율을 맞출 수 있을지 마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중간 광고 허용 등 재원 마련 지원책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지상파 UHD 본방송을 앞두고 TV 수상기 보급 문제, 콘텐츠 수급, 재원 마련의 어려움, 방송 장비 수급 문제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UHD 방송을 세계에 알리는 게 하나의 목표라면 6개월 정도 연기해 제대로 UHD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다. 정해진 기한에 쫓겨서 외부에 보여주기 식으로 무리하게 본방송을 강행한다면, 시청자를 볼모로 하는 쇼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박종석 편집주간 | 유주열
편집위원 | 허슬기, 김지옥, 남태현,
최권용, 김주형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인쇄인 | SJC성전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0층
전화 | 02-3219-5637
트위터 | @kobetajournal
페이스북 | @kobetajournal
홈페이지 | journal.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발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터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독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INVITATION

2016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초대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합회는 매년 격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방송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방송기술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6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에 초청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박종석** 드림

일시 및 장소 : 2016.11.24 .목 18시 30분 방송회관 3층 회견장

수상자
발표

2016 방송기술대상 수상자

대상	CBS 최영학
최우수상	SBS 김상진, MBC 노민철, KBS 전성호
우수상	SBS 정의준, MBC 스마트특수영상팀(단체), EBS 이홍식, KNN 이종록, YTN 신동훈
장려상	OBS 원태희, tbs 김동식, 아리랑국제방송 주조정실(단체)
특별상	KBS 박승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